경제장관회의 참석해 “주요 투자과제 중심 예산 편성”  
  
  
  
  
  
  
  
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기획재정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“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편성하겠다”고 밝혔다.최 부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“저출생 대응, 청년지원, 첨단·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”며 이같이 말했다.최 부총리가 언급한 것은 ‘협업예산'이다. 각 정부 부처 사이 쳐진 예산 편성의 칸막이를 넘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범부처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이다. 부처별로 진행되는 사업 가운데 같은 정책적 목표를 지닌 사업을 한 지붕 아래로 모아 검토하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.이어 최 부총리는 “민생문제 해결과 단단한 중산층 구축, 우리 경제 역동성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팀 앞에 놓인 숙제가 여전히 많다”며 “복합 이슈일수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 공간과 정책 여력을 넓혀 반드시 해답을 찾는 경제원팀이 되겠다”고 말했다.이날 최 부총리는 지역 창업생태계 성장을 위한 ‘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’도 발표했다. 기술창업기업의 약 60%, 벤처투자의 약 80%가 수도권에 집중된 쏠림 현상을 줄이겠다는 목표다. 먼저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를 올해 1천억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이상 신규 공급한다.민간 출자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% 이상 출자하는 경우 지자체와 법인의 출자 상한선을 현행 30%에서 49%까지 올리고, 수도권보다 열악한 법률·회계·컨설팅·디자인·지식재산권 등 전문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.한편, 기재부는 그간 ‘비상경제장관회의’로 운영된 회의 명칭을 이날부터 ‘경제관계장관회의’로 전환했다. 전임 추경호 부총리가 2022년 6월19일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연 뒤 약 2년간 지속한 회의 명칭을 바꾼 것이다.기재부 관계자는 “복합위기라고 부를 만큼 거시 지표가 나쁘지 않고, 회의 주제와 명칭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변경하기로 했다”고 말했다. 다만, 위기상황 대응 시에는 ‘비상경제장관회의’, 민생 정책을 점검할 땐 ‘민생경제장관회의’를 개최하는 등 탄력적으로 회의를 운용하기로 했다.